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확대...제3기 출범

협치위원 151명→185명 늘려... 분과위도 9개→11개로 확대
시민사회 참여 소통창구-협력 구심점... 지역정책 발굴·실행
제2기 2년간 126차례 회의... 정책의제 59건 발굴·정책 반영
강기정 시장, 협치위원과 즉석 소통... "시정작동 중요시스템"



광주시민관협치협의회는 지난 4년간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과 행정의 간극을 좁히며 일상 속 협치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성과를 안고,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3기 협의회'가 출범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전일빌딩245에서 민관협치협의회 제3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강기정 시장, 명진 광주시의회 의원,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민관협치협의회는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을 발굴·실행하는 공식 협의체로, 2020년 7월 시민사회의 18년 요구 끝에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관협치협의회가 유명무

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민선 8기 시정 운영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협치' 실현을 위해 민관협치협의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제3기 민관협치협의회'는 민관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정책에 녹아날 수 있도록 협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정책 제안과 안전 발굴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민주인권·이주민분과와 사회적경제·노동분과에서 이주민과 노동을 각각 분리해 기존 9개 분과위원회에서 11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했다. 또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인원이 151명에서 185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민관협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

했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본 협치'를, 이기훈 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그간의 민관협치 현황'에 대해,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은 '광주의 민관협치 돌아보기와 도약하기'를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됐다.

민관협치협의회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은 위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당초에는 강 시장의 시정 주요 현안 설명이 계획돼 있었으나 강 시장이 즉석에서 "현장에 있는 노동·청년·환경 등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자"라고 제안하면서 현장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는 단

순한 의견수렴 창구가 아니라 정책이 민심의 옷을 입고, 시정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협치 시스템이다"며 "민관협치협의회에는 광주를 아끼고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4월 출범한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는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플랫폼인 협의회 운영이 안착하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박도일 기자



광주 남구, 자활 꿈 담은 '국수 전문점' 운영 지역자활센터와 협력 국수랑 밀이랑 오픈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2개 점포 마련

"그동안 자활사업단에서 국수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 이번에 취업까지 성공했습니다. 새 일터인 국수 전문점에서 자활의 길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요."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의 한 점포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의 꿈이 영글고 있다. 4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스트리트 푸드존 3·4번 부스에서 '국수랑 밀이랑' 개점식이 열렸다.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구청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제공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랑 밀이랑 점포는 구청과 남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한 협력 사업 결과물의 하나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자활사업 참여자

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자활사업단인 국수랑 밀이랑을 만든 뒤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밀 국수 조리법과 고객 관리 방법 등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자활사업에 함께한 주민들 가운데 4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 이번에 문을 연 점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자활의 길을 활짝 열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10평 남짓 크기의 국수랑 밀이랑 점포에는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저소득 주민의 원대한 꿈이 담겨 있다.

특히 새 일자리를 구한 주민 4명은 지역에서 생산한 밀을 가공해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고, 체험 활동을 지원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의 기쁨을 누릴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마을리더 양성에 나섰다. 서구는 4일 들불홀에서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국내외 실천 사례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서구, 지속가능발전 마을리더 양성

4일 리더스쿨 개강, 교육 수료 후 9월에 교육 강사로 활동

수강생 40명이 참여하는 교육은 18일 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론과 협치, 경제·사회,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강사가 이어진다. 규정 강의 시간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세컨드(세상에

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시민참여학과 학점이 부여되고 이중 일부는 오는 9월에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서구는 오는 22일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며, 민관협업 전담팀을 운영해 하반기 중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정책 수립 이전에 생활에서 실천이 먼저"라며 "앞으로 도 지역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이웃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전남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지역 최초 직권조사 실현

전라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전남지역 최초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년, 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천86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확보한 명단에 대해 신고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부군보다 중서부군, 특히 완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완도지역 직권조사 필요성을 적극 설명, 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서 완도 희생자 125명 명단 확보

7월부터 조사해 8월까지 희생자 확정 등 마무리 예정

난 6월 말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완도지역 직권조사 개시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완도지역 직권조사 대상은 총 125명이다. 완도읍, 금일읍,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약산면 등 완도 6개 지역에 집중해 있고, 모두 여순사건 당시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에 대한 협조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이다.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우선 직권조사를 위한 실무 T/F팀(총괄) 위원회(조사)전남도-완도군)를 구성하고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에 소장 중인

공적문서를 수집해 대상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는 한편,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112명)을 중심으로 현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8월까지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검토보고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완도지역 직권조사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도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여순사건 시기 민간인 희생사건이 진상규명되도록 추가적인 사전 현지조사

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완도지역 직권조사는 여순사건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던 전남 동부군 주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 전남 전 지역에서 일어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며 "앞으로 유사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조속히 밝혀내는 등 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지역 여순사건은 사건 기간 포고령 2호(내란 및 국권문란)에 따라 완도 6개 읍면 주민 125명이 형무소에 수감돼 희생된 사건이다. 이 중 90명은 1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 후 석방됐으나 행방불명됐고 나머지 35명은 수감 도중 1950년 7월께 형무소 재소자 집단 희생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염성호 기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견본주택 사전점검' 최초 시행 분양사기-안전사고 선제 대응,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 기대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공동주택 분양에 앞서 과장 광고·허위 설명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매뉴얼을 수립, '견본주택 사전점검'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를 위해 '견본주택 사전점검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견본주택 운영 실태와 분양 내용의 신뢰성, 불공정 관행 등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첫 점검은 지난 3일 산수동에 분양을 앞둔 경남아너스빌 다원(SM틸썬)건설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동구 건축위원회 위원 3명(총괄 건축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원, 동구 건축위원)과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 직원들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모델하우스 내 전시 내용과 실제 시공 예정 건축물 설계도서 간 비교 검토 ▲불법 홍보물 설치 여부 ▲소방·전기·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 준수 ▲분양 광고 표시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시민들이 분양사기·과장 광고로부터 피해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법률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했다.

동구는 향후 분양 승인 전 견본주택에 대한 사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관련 매뉴얼을 지속 보완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철수 기자

